

김상훈의 세상읽기

‘철천지 원수’ 미국-이란도 한때 친구였다



주필

#1
 ‘철천지원수(徹天之怨讐)’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하늘에 사무쳐도록 한이 맺히게 한 원수’라는 뜻인데 극단적이고 화해하기 어려운 원한을 비유할 때 사용한다.
 지난 2월 28일부터 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바로 그 경우다. 이번 전쟁이 40여년 넘게 쌓아온 양국의 불신과 배신, 그리고 보복의 역사가 폭발한 결과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란 미국과 이란도 한때는 친구였다. 1925년 쿠데타로 집권한 레자 칸의 팔라비 왕조는 서구식 근대화를 추구했고 당시 중동 원유에 눈독을 들인 미국은 이 왕조를 적극 지원했다.
 하지만 1951년 반외세와 민족주의를 내세운 모하마드 모사데크가 국민적 인기를 끌며 총리로 취임하면서 미국과 대립했다.
 그는 석유산업을 국유화했고 소련의 영향을 받은 이란 공산당의 영향력도 커지자 미국은 영국과 함께 이란의 왕정 복원 쿠데타를 부추겼고 결국 1953년 성공했다. 재집권한 팔라비 왕조는 미국과 군사안보 협력을 시작하는 등 강력한 친미노선을 택했다.
 하지만 팔라비 국왕은 점차 독재자로 변해 ‘사바크’라는 비밀경찰을 만들어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하고 고문하고 처형까지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1963년 ‘백색혁명’이라는 급진적 현대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통적인 이슬람 가치관과 충돌까지 빚었다.
 이러한 왕정 체제의 비민주성과 빈부 격차, 이슬람 전통을 무시한 서구화에 불만을 품는 사람들은 갈수록 늘어났고 1979년 이란 민심을 등에 업은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을 성공시키며 신정일치 체제를 구축했다.
#2
 이 때부터 양국 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란 혁명 지도부는 미국으로 도망간 팔라비 국왕의 신병 인도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란 대학생들이 1979년 11월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고 외교관과 직원 52명을 억류하는 인질사건을 벌여 양국의 적대감은 극단으로 치달았다.
 인질들은 444일만인 1981년 1월 풀려났지만 이로 인해 양국은 국교를 단절했고 지금까지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다.
 이후 양국은 ‘원한이 너무 커 함께 살 수 없다’는 ‘불구대전(不俱戴天)’의 관계가 됐다.
 1980년부터 8년간 이어진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은 이란의 적인 이라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했고 1988년에는 페르시아만에 있던 미 해군 순양함인 이란 여객기를 군용기로 오인해 격추, 290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은 1996년 8월 이란을 테러 지원국으로 규정하고 이들 국가의 원유와 가스 개발 투자를 금지하는 법을 발표하며 강력한 경제제재에 들어갔다.
 심지어 2002년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란을 이라크, 북한과 함께 ‘악의 축’ 국가로 지목했다.
 이란도 이에 적극 대응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반군 등을 지원하며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맞서는 전략을 구사해 나갔다.

#3
 2009년 들어선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양국의 관계 개선을 도모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3년 이란 대통령과 30년 만에 통화를 했고 양측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을 해 나갔다.
 2015년 7월에는 양측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 등 핵무기 관련 작업을 중단하면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단계적으로 경제제재를 푼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란 핵합의가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이 합의는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무용지물이 됐다.
 트럼프는 2018년 5월 이란 핵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경제 제재를 부활시킨 것이다.
 2020년 1월에는 이란혁명수비대 최정예 쿠드스군 사령관을 암살 작전으로 제거했고, 지난해 6월에는 이란 내 3곳의 주요 핵시설을 스텔스 폭격기 등을 동원해 파괴했다. 이번에도 핵협상을 벌이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전쟁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는 국제사회의 관계를 규정하는 문장이 있다. 즉, 국가간 관계는 선악이 아니라 손의 을 따져 결정된다는 것으로 과거 적이었던 국가와도 공동의 이해관계가 생기면 협력할 수 있고, 과거 동맹도 국의 변화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1970년대 핑퐁외교 등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한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에게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국익만이 존재할 뿐이다”고 말해 유명해졌다.
 반세기 가까이 반목의 역사를 걸어온 미국과 이란도 이런 관계가 되지 말란 법은 없다. 휴전후 중전협상을 벌이고 있는 이들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기고

‘설마’ 대신 ‘안전’을 심어야 할 때



백진우

광주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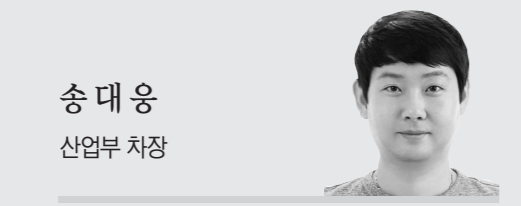
만물이 소생하고 따스한 온기가 내려앉는 봄은 누구에게나 설렘과 반가움을 주는 계절이다. 겨우내 움츠렸던 생명들이 기지개를 켜고 시민들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산과 들로 향한다. 하지만 소방관들에게 봄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의 끈을 팽팽히 조여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봄은 사계절 중 습도가 가장 낮고 대기가 건조해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거대한 화마로 키워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소방안전본부의 최근 5년간 화재 통계 분석에 따르면 봄철(3~5월) 화재 발생 비중은 사계절 중 가장 높은 29.2%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 경계해야 할 대목은 화재 원인의 무려 53.1%가 ‘부주의’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담배꽂초 무단 투기, 쓰레기 소각, 눈·발두렁 태우기 등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행하는 사소한 방심들이 매년 반복되는 비극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

소방관으로서 현장에서 마주하는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를 목격할 때다.
 광주는 도심의 편리함과 수려한 산림 자원이 긴밀하게 공존하는 도시다. 도심 곳곳을 감싸안은 산등성이와 인근의 농경지들은 시민들의 소중한 쉼터이자 삶의 터전이지만, 기후가 건조한 봄철에는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띠고 있다. 건조한 날씨 속에서 산림 인접 지역의 작은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불씨는 돌풍을 타고 순식간에 산으로 치달거나 인근 주택가로 번질 수 있다.
 특히 도심과 산림의 경계가 모호한 지형적 특성상, 한번 시작된 산불은 막대한 진압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도 완전히 꺼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수십 년간 가꿔온 생태계를 단번에 잿더미로 만든다.
 이에 소방은 봄철 화재예방대책 기간을 정해 대형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산림 인접 지역 순찰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소방서의 행정력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안전 수칙 준수다.
 화재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시민 여러분께 세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
 첫째, 야외 활동 시 절대 화기 취급을 하지 말아야 한다. 등산 시 리더 등 인화 물질 소지는 금물이다. 특히

운전 중 창밖으로 던진 담배꽂초는 마른 풀밭에 떨어져 대형 화재의 도화선이 된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농촌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해충 방제를 목적으로 눈·발두렁을 태우는 관습은 실제 방제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화재를 진압하려면 어르신들이 인명 피해를 입는 사고로 이어진다. 소각 대신 지자체의 파쇄 지원 사업 등을 활용해 안전하게 영농을 준비하시길 당부한다.
 셋째 주거 공간 내 안전 점검의 생활화다. 봄철에 야외 활동이 잦아지는 만큼 집을 비울 때는 가스 밸브와 전열기구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각 가정에 비치된 소화기를 점검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작은 정성이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안전은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안전의 주체가 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때 비로소 완성된다.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예방은 우리의 의지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번 봄에는 설렘과 반가움 뒤에 안전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려 주길 바라며 시민 한 명 한 명의 작은 실천이 모여 사고 없는 일상,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가장 튼튼한 방화벽, 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취재수첩

담합하면 퇴출까지...시장질서 바로 세울까



송대용
 산업부 차장

“또 담합인가.” 언론에서 담합 적발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들려오는 시민들의 반응이다. ‘재수 없으면 걸리고,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비뚤어진 계산법이 오랜 기간 시장의 그늘에 깊숙이 뿌리내린 탓이다.
 최근 공정위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칼을 뽑았다. 반복되는 담합을 뿌리 뽑기 위해 ‘시장 퇴출’이라는 초강수를 띄운 것이다. 단순히 벌금을 올리는 차원이 아니

다. 등록 취소, 영업정지, 그리고 입찰 제한까지 동원해 해당 기업이 시장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다.
 ‘퇴출’이라는 카드는 이미 건설산업기본법 등 일부 영역에서 그 효능이 입증된 바 있다. 과징금 몇 푼을 내고 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사업의 존폐’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주목할 점은 임원 해임이나 직무 정지 등 ‘개인 책임’을 강화한 부분이다. 담합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조직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뒤통을 주고받는 핵심 인물을 제재하지 않으면 그 체계가 끝나도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문진다. 조직뿐만 아니라 사람을 직접 겨냥해 정책의 칼끝을 들린 것은 담합의 연결 고리를 끊

어내려는 매우 영리한 접근을 보인다.
 하지만 현장에서 묻게 되는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다. ‘과연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집행될 것인가’이다. 제도는 화려해도 집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공정위가 퇴출을 권고하더라도 인허가권을 전 각 부처가 산업 보호 논리나 이해관계에 얽혀 머뭇거리면 어떤 정책은 또다시 공염불에 그친다. 기업들이 ‘버티면 된다’는 학습효과를 다시 발휘하지 못하도록 부처 간 단호한 협조 체계와 일관된 법 집행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시장 경쟁은 단순한 기업들이 치열하게 싸우라는 뜻이 아니다. 가격과 품질, 서비스라는 경제 기본 원칙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 안전장치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가가 뒤따라야 한다. ‘퇴출’이라는 단어가 공문서 속의 글자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기업의 간판을 내리는 사례로 입증될 때 비로소 시장의 분위기는 바뀐다.

사설

전남 어류 양식업 ‘위기’ 체질개선 서둘러야

국내 어류 양식업 1위 전남의 자리가 위태롭다. 그동안 압도적으로 지켜왔던 ‘왕좌’가 지난해 2위 제주에 거의 따라 잡혔기 때문이다.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에는 위기에 놓인 전남 어류 양식업의 현실이 드러나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생산량은 2만7325t으로, 제주(2만7227t)와의 차이가 98t에 불과하다. 1년전과 같은 순위지만 그 때는 1위와 2위와의 격차가 2500을 넘었다. 불과 1년만에 2위와의 격차가 거의 사라진 것이다.
 이는 양 지역의 양식방식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제주의 경우 265개 양식장중 264개가 육상수조식으로 운영돼 바다 온도의 영향을 덜 받는 반면 전남은 대부분이 해수온의 변화에 민감한 해상가두리 양식이다.
 이에 지난해처럼 고수온 특보 발령일(85일)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처럼 고수온이 기승을 부릴 경우 한 해 양식을 망치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고수온에 취약한 조피볼락(우럭) 생산량은 4100t으로 지난 2024년(5400t)보다 1300t 줄었는데, 이는 전국 감소량(2648t)의 거의 절반이다.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전남 양식장 수 감소로 이어졌다. 지난해 전국에서 양식장 수가 27개 감소했는데 전남 양식장 수도 490개에서 463개로 27개 줄어든 것이다. 이는 사실상 전남에서만 양식장이 문을 닫은 것이다 다름없다. 다른 지역은 현상 유지 또는 소폭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전남에서 감소한 경영체(27곳)중 26곳이 소규모 해상 가두리 양식장으로 나타났다.
 고수온 피해와 경영 악화를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은 것이다.
 문제는 올해도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기상청이 전망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런 예보가 현실화될 경우 전남 양식장은 또 다시 고수온 피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겨우 지켜 온 1위 자리도 이번에는 제주에 넘겨줄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전남 어류 양식장들은 이런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해상 가두리 양식에서 벗어나 육상 수조양식·스마트양식 도입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도 절실하다.

광주 우치동물원 이유있는 진화 ‘눈에 띈다’

광주 우치동물원은 사실 그저 그런 동물원이었다.
 광주 남구 사직동 사직공원에 있던 동물원이 1991년 이곳으로 이전해 지금에 이르렀는데 그동안 그다지 인기가 없었다. 무료로 관람할 수 있지만 시설이 낡고 좁은데다 매년 사육환경 개선공사까지 진행해 관람하기 불편했기 때문이다.
 이런 우치동물원이 최근 광주시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실제로 올해 1~3월 방문객은 11만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5만명보다 약 2.1배 증가했고 지난해 연간 방문객이 지난 2024년보다 1.4배 늘어난 31만명을 기록했다. 올해도 이같은 추세가 유지될 경우 연간 방문객은 40만명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단순 관람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동물 구조와 치료, 회복 과정을 시민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변신한 게 큰 역할을 했다.
 현재 이곳은 다른 동물원과 달리 동물의 삶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붉은꼬리보아뱀, 알락꼬리여우원숭이 등의 수 술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1986년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태어나 1996년 이곳으로 옮겨와 29년을 지내내다 지난해 숨진 하마 ‘히보’의 일대기와 추억할 수 있는 추모 공간도 마련했다.
 지난해부터 4월과 5월 한시적으로 사육사와 수의사가 직접 진행하는 동물 해설·교육 프로그램 ‘동물원 이야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동물과 사는 남자’라는 제목으로 열리고 있다.
 이는 동물원의 호랑이, 코끼리, 기린, 낙타, 들소들의 이야기를 사육사들과 수의사들이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제목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패러디한 것이다.
 지난해 6월 호남권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공공 동물의료 기능도 확대해 해남·여수·순천·제주 등지의 동물 진료와 수술을 지원하고 있고 응급 채취용 농가에서 구조된 사육용 4마리를 보호하는 등 구조·보호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동물원이 명실상부한 생명 교육의 장으로 변해 생명존중의 가치를 관람객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동물원이 앞으로 동물복지와 교육 기능을 더욱 강화해 시민과 함께하는 동물원이 되길 바란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치부 370-7040	경제부 370-7020	산업부 370-7010	사회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논설총괄 370-7040	편집 370-7082	사건부 370-7050	독자관리 370-7080	서울지사 02-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